

< 要 約 >

I. 會議의 背景과 爭點

- (背景) 지난 3월 6일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社會開發頂上會議는 貧困, 失業 등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社會的 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汎世界的인 開發戰略과 實踐方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임
- (主要 爭點) 최빈국의 社會개발을 위한 先進國의 財政負擔 문제, 勞動 및 環境 조항의 엄격한 적용 등에 있어서 先進國과 開發國이 견해 차이를 나타냄
- (政府의 立場) 開發國의 社會開發에 적극 協力하겠다는 것이지만 開發國 負債의 완전 蕩滅이나 先進國이 요구하는 勞動·環境 조항의 엄격한 적용에는 반대함

II. 會議 評價 및 向後 展望

- (會議의 意義) 회의가 구체적인 성과없이 종결되었지만 빈곤, 실업, 社會분열 등 人類의 社會問題를 종합적으로 點檢하는 계기가 됨
- (向後 展望) 우리나라의 對外援助 增大와 國內 社會開發을 선진국 수준으로 이행하라는 國際的 壓力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國內적으로도 社會개발과 복지 분야에 대한 要求가 늘어날 것이며 勞動·環境·人權관련 民間團體의 활동이 활발해 질 것임

III. 示唆點

- (政府) 개도국의 社會개발을 위한 對外援助의 增額이 불가피할 것이며, 國內적으로도 福祉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社會보장 관련 稅金 負擔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企業) 기업도 社會開發(公益活動)에 參與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勤勞條件 改善, 環境保護 등의 필요성이 높아짐. 또한 社會保險 分擔金 增額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I. 會議의 背景과 爭點

- (背景) 社會開發頂上會議는 빈곤, 실업, 사회적 갈등 등 각국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國際的 協力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음
- (主要 爭點) 開發國은 자신들의 부채담감과 사회개발을 위한 先進國의 財政 負擔을 요구하였고 先進國은 勞動·環境 조항의 설정과 이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였음.
- (政府의 立場) 開發國의 社會開發에 적극 協力하겠다고는 것이지만 開發國 負債의 완전 蕩滅이나 先進國이 요구하는 勞動·環境 조항의 엄격한 적용에는 반대함

○ 유엔 社會開發頂上會議란?

- 社會開發頂上會議(WSSD: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는 유엔에서 주관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開發會議임
 - 회의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개최되었음
- 유엔이 최근에 개최한 일련의 개발회의를 보면 국제사회와 유엔의 主要 關心事가 政治·軍事·經濟 문제에서 社會開發과 人間的 福祉問題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90년대에 들어서 유엔이 개최한 회의는 아동회의(90), 환경회의(92), 인권회의(93), 인구회의(94)임

○ 會議의 背景

- 脫冷戰 이후 국가나 영토에 대한 안보의 중요성이 퇴색하고 「人間 安保」의 중요성이 부각됨
 - 人間安保는 지난해 유엔의 人間開發報告書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인간이 영위해야 하는 '삶의 質'을 의미함
 - 인간안보의 내용은 1) 衣食住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 2) 인권, 민주주의 등 政治的 權利의 향유, 3) 고용을 포함한 經濟的 安定임

- 지금까지 國家나 領土에 국한되었던 안보개념이 個人이나 國民의 안보에까지 확대된 것임
- 유엔 社會開發頂上會議는 이러한 「人間 安保」를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를 國際的 協力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개최됨
 - 世界化, 開放化의 진전에 따라 인류의 社會 問題가 國際的 性格을 띠어가고 마약 밀매, 이주 노동자 등 各國간 協력이 필요한 부문이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진정한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는 人間安保에 대한 威脅을 解消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世界的 次元의 共同努力을 기울이자는 것이 이번 회의를 개최한 배경임
- 이번 회의의 主要 議題는 貧困 退治, 生産的 雇傭의 擴大, 社會的 統合의 增進임
 - 貧困 退治: 절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개도국의 負債 蕩滅
 - 雇傭 擴大: 失業問題의 해결과 勤勞環境의 개선
 - 社會的 統合: 소외계층 지원 및 각종 差別 撤廢

<유엔 經濟·社會 指標>

	선진국	개도국
세계 국민총생산 점유율 (GNP)	84.7% (상위 20% 국가군)	1.4% (하위 20% 국가군)
1인당 소득 (GDP) 비율 (하위 20% 국가군=1)	61 (상위 20% 국가군)	1 (하위 20% 국가군)
의료혜택 ('85-'91년) 수혜율	81%	54%
군사비 지출 (억 달러)	6,490	1,180

자료: '94년 유엔 통계 (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 인용)

○ 主要 爭點

- 主要 爭點이었던 開發國의 負債蕩滅, 20/20 契約, 勞動 및 環境問題에 있어서 선진국·개도국간의 참여한 이해의 대립이 있었음

<主要 爭點 要約>

	선진국	개도국
부채탕감	· 개별국가가 스스로 해결 · 전액 탕감, 시한 설정 반대	· 96년 이전까지 완전 탕감 · 추가적인 원조 요구
20/20 계약*	· 추가재원 조성이 어려움	· 예산 운용에 심각한 제약
노동·환경문제	· 환경과 노동 조항 삽입	· 보호무역의 구실이 됨

*: 20/20계약은 선진국이 공적개발원조(ODA)의 20%을 사회개발에 제공하고 이를 받는 개도국에서는 정부예산의 20%를 사회개발에 할당하자는 것

○ 政府의 立場

- 이번 회의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은 개도국에게 경제성장 경험을 소개하고 開發國의 社會開發에 적극 協力하겠다는 것이지만 주요 쟁점사항에 있어서는 사안별로 선진국 또는 개도국의 입장을 취함

<政府의 立場 要約>

구분	방향	주요 내용
기본 입장	개도국에 대한 지원 확대	· 공적개발원조(ODA)의 증액 (GNP의 0.06% → 0.3%: 선진국 수준) · 개도국 인력양성 지원, 전문가 파견 확대 · 개도국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및 투자 확대
	선진국의 양보 촉구	·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도국에 대한 배려 ·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이전
주요 쟁점	선진국 지지	· 개도국 부채의 완전 탕감 반대 · 개도국 요구수준(GNP의 0.7%)까지의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는 것은 반대
	개도국 지지	· 노동이나 환경 규정의 엄격한 적용 반대

자료: 정부 대표단 및 대통령 연설문, 각 일간지 보도 내용

II. 會議 評價 및 向後 展望

- (意義) 회의가 구체적인 성과없이 종결되었지만 빈곤, 실업, 사회분열 등 人類의 社會問題를 종합적으로 點檢하는 계기가 됨
- (展望: 海外) 對外援助를 확대하고 國內 社會開發을 선진국 수준으로 이행 하라는 國際的 壓力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展望: 國內) 國內적으로도 사회개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이며 勞動 · 環境 · 人權 관련 民間團體의 활동이 활발해 질 것임

○ 會議 結果 및 評價

- 사회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였지만 具體的인 成果없이 '코펜하겐 선언문'만 채택하고 회의가 종결됨
- 개도국의 外債問題는 최빈국에 한해서 사안별로 탕감해주시기로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음
- 20/20 契約과 公的開發援助金을 GNP의 0.35%에서 0.75%로 확대하자는 것도 관심있는 국가만 채택한다는 권고적인 수준에서 결말이 남

<코펜하겐 선언문>

부 문	내 용
여건 조성	사회개발 달성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적 환경을 창조
빈곤 해소	빈곤 근절을 위하여 개별 국가의 노력과 국제적 협력 병행
완전 고용	완전고용의 달성으로 경제적으로 안전한 생활 영위토록 함
사회적 통합	소외계층 지원 및 각종 차별적 조치 철폐로 사회적 통합 촉진
여성참여	남녀의 평등과 공평 달성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에서의 여성의 참여 촉진
최빈국 문제	저개발국가의 경제적·사회적·인적자원의 개발 촉진
정책 반영	빈곤 근절, 고용 확대, 사회적 통합을 정책에 반영
효율적 자원배분	국가별 행동과 지역적·국제적 협력으로 사회개발에 할당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
국제적·지역 적 협력체제	사회개발을 위한 국제적·지역적 협력체제 개선 및 강화
의료 및 교육	기본적인 의료 보장 교육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기회를 부여

- 빈곤, 실업, 사회분열 등 인류의 社會問題를 종합적으로 點檢하고 대책 마련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음
- 인간 중심의 발전이라는 人間安保 개념을 창출하고 탈냉전 이후 안보의 개념은 人間安保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봄
- 人間安保를 위협하는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반자적인 정신에 입각한 國際協力の 시대가 열림

○ 向後 展望

- 國際秩序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競爭이 강조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協力이 강조되는 二重性을 띠는 것임
-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경쟁력 위주의 경제 논리와 사회개발로 대표되는 협조·공영의 논리가 세계적인 조류가 될 것임
- 社會開發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國際的 壓力이 높아질 것임
- 회의 결과가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世界的인 行動規範으로써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게 됨
- 對外的으로 대외원조의 증액, 對內的으로 노동·환경·인권·여성 문제 등에 있어서 先進國 水準의 실천을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이 높아질 것임
- 國內的으로도 정부에 대한 社會開發과 社會福祉에 대한 要求가 늘어날 것임
-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社會開發에 대한 關心이 제고됨
- 國內的으로 정치적인 民主化가 진행되고 경제 성장에 따른 所得 水準의 向上으로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질 것임
- 노동·환경·인권과 관련된 非政府·非營利 民間團體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임
- 이번 회의가 민간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개최되었고 각국의 비정부기구가 이번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등 사회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사회개발이 정부와 국제단체가 전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民間團體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므로 勞動, 環境, 人權관련 단체의 역할과 활동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III. 示唆點

- (政府) 개도국의 社會개발을 위한 對外援助의 增額이 불가피할 것이며, 國內的으로도 福祉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社會보장 관련 稅金 負擔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企業) 기업이 社會開發에 參與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勤勞者 權利, 環境保護, 社會保險 分擔金 增額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 政府

- 社會개발과 관련된 정부의 對外 協力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國際社會에 대한 寄與가 요구될 것임
 - 정부가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OECD에서 권고하는 해외원조 수준은 GNP의 0.7%임 (OECD 회원국의 평균 해외원조 수준은 GNP의 0.3%임).
 - 따라서 GNP의 0.06% 수준인 우리나라의 公的開發援助(ODA)가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對開途國 支援 現況>

(백만 달러)

	1990	1991	1992	1993
공적개발원조(ODA)	89.2	99.9	115.2	176.4
GNP 대비 비중	0.04%	0.04%	0.04%	0.06%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감』, 1994

- 人間안보와 관련된 人權, 環境, 勞動 부문에 대한 國際的 壓力이 높아질 것이므로 관련 法規에 대한 整備가 필요할 것임
 - 정부가 목표로 하는 OECD 가입을 위해서도 環境·勞動 부문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함
 - 선진국이 勞動·環境問題를 이번 회의에서도 제안함으로써 환경 및 노동 라운드에서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國內的으로도 국민의 福祉를 향상시키기 위한 投資 擴大가 예상됨
 - 정부가 成長 爲主의 發展戰略을 사용한 결과 경제 수준에 비교하여 社會開發이 뒤떨어진 상태임
 - 반면 국민의 복지에 대한 수요는 소득의 향상에 따라 급속히 늘어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따라서 국민의 기본적인 生活保障을 위한 支出과 국민의 복지와 관련된 社會保險(의료보험, 국민연금제도,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財政 支出이 점진적으로 擴大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도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하여 ‘삶의 질을 世界化’하기 위한 國民福祉 中·長期 計劃을 마련할 것임

<GNP 對比 社會保障費의 國際比較>

	한국(92년)	미국(90년)	독일(90년)	일본(89년)
조세부담률	19.4%	21.7%	23.3%	21.1%
사회보장부담률	2.4%	7.0%	15.2%	9.3%
국민부담률	21.8%	28.7%	38.6%	30.4%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감』, 1994

주: 조세부담률= (국세+지방세)/GNP, 사회보장부담률= 사회보험 관련 지출/GNP,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

- 정부가 사회개발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稅金負擔이 늘어나고 政府 支出 構造가 변할 것으로 예상됨
 - 사회개발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租稅負擔率을 점진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을 것임.
 - 정부 지출에 있어서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經濟開發費 비중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社會開發費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경제개발비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民資誘致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歲出 對比 經濟開發費 및 社會開發費 比重의 國際比較>

	한국('95)	미국('90)	독일('90)	일본('90)
경제개발비 비중	22.2%	9.6%	9.6%	7.5%
사회개발비 비중	8.3%	20.7%	43.0%	21.5%

자료: 경제기획원;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1992.

○ 企業

- 企業은 경쟁력 강화 외에도 人間 尊重 및 社會開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에 점차 직면하게 될 것임
 - 國民 生活水準의 向上과 社會開發로 대표되는 국제적 조류에 맞추어 기업의 사회개발에 대한 기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消費者의 性向도 변하여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진 기업 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음
 - 기업의 환경보호, 노동자 권리의 보호, 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民間團體와 國際社會의 關心과 壓力이 높아질 것임

- 企業은 勤勞者 權利, 環境保護, 각종 社會保險 分擔金 증액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됨
 -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은 근로 조건 및 근로 환경의 개선, 환경보호 및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함
 - 국민 복지의 향상을 위해 社會保險을 擴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대한 기업의 분담금 증액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국제적으로도 우리 기업이 진출한 低開發 國家의 社會開發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外國의 先進企業들도 활발한 社會開發 活動을 통하여 기업 이미지와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는 등의 효과를 얻고 있음

<기업의 社會開發 事例: GM 과 Nissan의 경우>

	GM	Nissan
회사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복지, 작업 환경 등 최고의 근로조건 추구 ○ 제품 생산이 환경 친화적이 되도록 하는 환경 규약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원 개인의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 지원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복지단체,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문화단체에 기부 ○ 환경관련 법과 규제 제도의 개발에 정부 및 타 기관과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활동을 총괄하는 사회문화실 설립 ○ 닛산 그린캠페인(환경 보호) ○ 닛산 과학진흥재단 설립
해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지역의 자선사업, 교육 및 사회프로그램 지원 ○ 진출지역의 환경 훼손 방지에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지역의 소수민족, 환경보호, 지역 개발 프로그램 지원